



코로나로 노동자·서민층이 가장 고통받는다

관련 기사 5~8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말한다
코로나는 풍토병이
되고 있는가

5~8면

4·7 재·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3면

자본주의와 변화하는 가족
왜 지배자들은
결혼·출산에
이래저래라 할까?

9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런던은 금융 지배력
을 잃고 있는가?

4면

네이버 '실검' 폐지한다고
달라질까?
기성 체제 수호하는
네이버 등 포털

2면

미등록 이주민 40만 명
무조건 전면
합법화하라

10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12면

네이버 ‘실검’ 폐지한다고 달라질까?

기성 체제 수호하는 네이버 등 포털

안형우

네이버가 2월 25일부터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한다.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는 그동안 여론 조작과 기업광고에 악용된다고 비판받아 왔다.

해당 서비스 폐지는 대중의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일까? 물론 비판을 의식한 것일 테지만, 이 서비스를 폐지해도 영향력과 수익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는 계산이 훨씬 더 중요했을 것이다. 이 서비스를 출시한 16년 전에 비해 사용자의 이용 행태가 상당히 변했다는 네이버 자신의 설명에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구글, 네이버, 다음은 인터넷 포털 분야를 과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이런 지위를 이용해 뉴스 유통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난해 한국인 68.8퍼센트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봤다.

여러 언론 매체를 한 사이트에 모아 놓은 것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점이 있다. 이런 편의를 제공하면서 포털 뉴스 서비스(운영 기업)가 목표로 하는 것은 사용자를 끌어모아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체류 시간은 각종 수익 모델의 바탕이 된다. 이런 경쟁 과정에서 ‘포털’은 (단어 뜻 그대로) 이데올로기 전파의 ‘관문’ 구실을 하는데, 점유율이 커질수록 이 점이 중요해진다.

네이버는 재계 서열 34위의 거대 기업이 됐고, 주류 질서의 확고한 일부이다. 네이버 경영진은 뉴스와 검색 서비스에서 주류 질서에 맞는 사상을 담은 뉴스와 의제(“상식”)를 우대하는 것이 자기 계급에 유리하다는 것을 안다. 이런 문제에서 구글이나 다음도 다르지 않다.

기업·정치권과 유착

네이버는 그때그때의 비판 여론을 피하려고 뉴스 배치 기준을 바꿔 왔다. 하지만 주류 매체의 기사와 주류가 보여 주고 싶어 하는 의제가 압도적으로 강조돼 배치되고, 좌파 매체나 노동계급의 의제들은 배제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홈”에서 기사를 읽는데, 여기 배치된 기사는 대부분 주류 언론의 것이다. 기사를 쓰는 지금 네이버 “뉴스홈”에 배치된 “헤드라인 뉴스” 기사 6개의 출처를 보면, <조선일보> 2개, <동아일보> 2개, <국민일보> 1개, <YTN> 1개



네이버 뉴스에선 주류 매체들과 그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기사가 배치된다

다. “뉴스홈”에 노출되려면 제휴 최고 등급인 콘텐츠 제휴를 맺어야 한다. 단순히 뉴스 검색에 노출시켜 주는 검색 제휴와 달리 콘텐츠 제휴를 맺을 언론은 소수로 관리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입점 언론 선정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맡겨 책임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자체가 주류 언론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 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 15곳 중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주류적 언론 단체가 7곳이고, 2020년 심사를 맡은 위원 30명 중 현직 언론인이 9명, 전직 언론사 임원·간부가 3명이다.

이번 심사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좌파적 인터넷 언론 <참세상>을 네이버 콘텐츠 제휴에서 검색 제휴로 강등시켰다. 자매지 <위커스> 기사를 전송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런데 2018년에 같은 일을 한 <조선일보>는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만 받았다. 주류 언론에는 솜방망이 제재만 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연대> 같은 급진 좌파 언론은 네이버에 검색 제휴를 신청할 때마다 탈락하고 있다.

네이버는 힘 있는 기업과 단체의 압력을 받아 뉴스 배치를 변경하기도 했다. 2016년 10월 축구연맹의 청탁으로 축구연맹에 비판적인 <오마이뉴스>

기사를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치운 것이 다음 해에 폭로됐다. 폭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런 조작이 수시로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성 같은 대기업과 네이버·다음 두 포털이 서로 협조해 왔다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삼성 사장 장충기가 이재용 승계 당시 관련 기사들을 내려 달라고 포털들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실제로 기사가 내려갔다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이다.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에서 “네이버는 평정됐지만 다음은 여전히 폭탄이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폭로도 나왔다. 결국 다음은 2008년 촛불 운동 때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 토론 서비스인 “아고라”를 2009년 메인 화면에서 치웠다.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다. 네이버는 2016년에 박근혜·정유라 관련 검색어를 삭제했다.

포털과 정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연설이 다음 포털의 메인에 뜨자 보좌관에게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하는 문자를 보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문재인 캠프 SNS 본부

장을 맡았던 윤영찬은 지난해 국회로 무대를 옮기기 전까지 문재인인의 실세 측근(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중 하나였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행정·사법기관이 요청하면 실시간 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던 것이 2016년 말에 확인되기도 했다. 국가권력은 손쉽게 포털을 조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알고리즘은 중립적인가

2017년 네이버는 자신들이 뉴스를 편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인공지능 뉴스 추천 알고리즘을 도입했다.

그러나 인터넷 대기업들이 채택하는 알고리즘은 중립이 아니다. 추천 대상 자체가 주류 언론으로 제한돼 있으니 사실 인공지능이 추천하든 사람이 추천하든 주류 질서에 유리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네이버 뉴스 홈에는 “섹션별 뉴스는 AiRS[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 추천으로 구성된 뉴스를 제공합니다” 하고 적혀 있는데, 대부분 주류 언론 기사다.

또한 네이버의 뉴스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자극적인 기사를 좋은 기사로 판단한다. 최신성도 중요 기준인데, 이는 심층 기사에 불리하다.

구글은 오래전부터 알고리즘으로 뉴스를 추천해 왔는데, 구글의 뉴스 페이지는 주류 언론 일색이다. 구글의 뉴스 추천 알고리즘도 대형 언론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고리즘 조작 역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최근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사사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의 검색 순위를 높인 것 때문에 과징금 269억 원이 부과됐다. 구글도 쇼핑 서비스에서 똑같은 행위로 2017년 유럽연합에서 과징금 24억 유로(3조 2000억 원)를 받은 바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된 지 20년이 넘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이란 수단 자체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민주주의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인터넷은 거대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는 공간이 됐다.

네이버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고, 구글·다음 등과 경쟁하며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네이버의 행보를 보면 그 자신이 대기업으로서 체제 수호에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며, 그래서 정치권력파도 유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이버 뉴스·검색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은 지배계급의 사상이 어떻게 새로운 매체에 관철되는지 보여주는 최신 사례인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학교 ☐ 기타)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4·7 재·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김문성

설 전후의 정치 풍경에서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떨어진 위상이었다. 가뜰이나 민주당이 4월 7일 재·보선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위기가 더 커 보인다.

전 환경부 장관이 정치적 관행을 따른 문제로 구속되고, 2월 초 검찰 인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이 여권의 현 상태를 보여 준다. 문재인이 갈등을 수습하려 해도 검찰의 현 정부 수사 때문에 청와대-검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 사퇴 압력을 받고 있고, 현 정부에 불리한 판결들이 잇따라 난 것도 심상찮다.

이 때문에 문재인은 다급하게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있다. 2월 17일 문재인은 고(故) 백기완 선생의 빈소에 직접 조문을 갔다. 진보계의 추모 분위기에 은근슬쩍 끼어들어 진보연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진보계 지도자들에게도 도와 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 사찰을 폭로해 진보계의 위기감도 자극하려 했다. 이는 또한 당시 청와대 정부수석이었던 현



문재인이 위기 속에서 왼쪽 깜빡이를 또 켜지만, 진짜 발걸음은 기업주들을 향해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을 겨냥한 면이 있다.

그리고 문재인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직접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선 당시 공공부문

일자리를 수십만 개 창출하겠다고 약속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정도로 흐지부지돼 있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을 2~3차보다는 액수와 범위를 늘려서 재·보선 선

거 운동이 한창일 3월 중에 지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4월 재·보선

문재인의 위기로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는지 모른다고 걱정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의 일부가 4월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다시 표를 던질 수 있다. 한국의 제1, 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뽑는 선거이므로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파 야당들이 대선 주자급들을 서울시장 선거에 내보낸 이유이다. 차기 대선 지지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등을 돌린 사람들도 대체로 우파의 재집권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재·보선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개혁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환멸은 지속될 것이다. 가령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부동산 문제는 결판 공공 공급이고 속은 시장주의적 공급인 대책이다. “노동 존중”을 표방해 놓고 각종 노동계약을 추진했고, 중대재해법은 기업주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법(따라서 예방 효과가 없는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안타깝게도 노동계 대표 조직들(민주

노동·정의당·진보당)의 지도부들은 이런 실체를 폭로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을 진보 쪽으로 가져오려는 좌파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정치적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17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의당을 비판했다. “[정의당이] 외연 확장을 의식해 진보적 목소리를 안 내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지지층이 되어야 할 노동자, 농민, 빈민이 떨어져 나간다.”

정의당은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지만 선거 판세에 아무 영향도 없다.

진보당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삼가거나 절제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번 재·보선에서 정부에 대한 실망이나 우파에 대한 반감은 정치적으로 표현되기가 더 어렵게 됐다. 이 틈을 타, 반(反)문재인과 중도를 표방한 안철수가 (불안정한) 서울시장 선거 지지를 1위를 달리고 있다.

근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정의당(과 진보당)의 정치적 존재감을 미미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 당 자신이 온건한 노선을 채택한 것도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보여 주는 법원·검찰과의 갈등

최근 정부의 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은 아마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일 것이다. 정권이 바뀐 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명직들을 친정부 인사들로 교체하려고 한 사건이었다. 그 과정의 일부 행위들이 위법으로 판결난 것이다.

대체로 이런 인사 교체는 정권이 바뀌면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정치적 관행이었다. 사임 압력을 받는 정부 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임명직 인사들도 (몇몇 예외를 빼고는) 대부분 알아서 물러났다. 주류 언론들도 정권 초 ‘허니문’ 기간에는 웬만하면 이를 비판하지 않는다.

이명박 측근인 박영준이 훗날 회고하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간접으로 임명하는 자리가 2000여 개이고, 대선에 도움을 줘서 챙겨야 할 인사는 5000명 정도 된다. 그래서 5년 임기 동안 적어도 2번은 교체를 해 줘야 는 공형상 인사가 소화된다는 것이다.

기소된 지 햇수로 3년 된 사건인데, 이제야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관행’이라는 사안의 성격 때문에 법원이 난처해서였을 것이다. 최근 판결에는 여당이 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 임성근을 탄핵소추한 것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번 판결이 주목

을 받은 것인데, 판결 의도가 무엇이든 정치적 관행을 이행한 김은경의 행위를 진보 측이 변호할 이유는 없다.

사실 임성근 국회 탄핵도 위기에 몰린 민주당이 진보계를 향해 포퓰리즘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가 드러난 지난 3년간 개혁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다가 이제 와서 겨우 한 명 탄핵으로 생색낸 것이다.

여권이 기대한 효과는 거의 없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때마다 마치 자신들이 개혁가라서 모함을 받는 척해 왔다. 이런 속임수는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역겨운 위선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제 냉소와 조롱거리가 됐다.

이런 환멸을 감지한 보수적인 판사들이 보복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칼끝은 단지 청와대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기업주 신문 <문화일보>에 따르면, “[법원 안에서] 진보진영의 여론을 등에 업은 이른바 ‘민주적 통제’에 맞선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임성근 국회 탄핵의 또다른 후폭풍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압력이다. 김명수가 지난해 사표를 내려는 임성근을 말리면서 국회에서 탄핵할 수도 있으니 사표를 내지 마라고 종용한 일을 임성근이 폭로한 것이다. 고위직 판사가 대법원장과 대화하는 걸 몰래 녹음해 폭로한 것은 법원 안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져 왔다는 방증일 것이다. 녹음된 대화는 지난해 총선 직후의 대화였다. 당시 사법 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판사 출신 이수진과 이탄희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직후 판사 국회 탄핵을 운운할 때였다.

판사 탄핵

우파 야당은 즉각 김명수와 여당의 사전 교감설을 제기하며 김명수 사퇴 공세를 벌이고 있다. 썬법은 복잡하지만 그들은 밀저야 본전으로 여기는 듯하다. 대법원장 국회 탄핵은 국회 내 세력상 불가능하고, 김명수가 사퇴해도 새 대법원장을 다시 문재인이 지명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명수가 자진 사퇴하면 문재인 정부의 위신이 더 추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 정부도 전 정부나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드러내어 우파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희석시키고,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이 미치기를 기대하는 듯하다.

사실 사법 농단에는 양승태와 그 수하인 임종현 등이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사찰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김명수는 두 곳 모두에서 회장을 지냈고,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었다. 그리고 대법관이 아닌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된 최초 인물이다. 이런 인사가 대통령 지명으로 대법원장이 된 이후 세력 교체를 시도하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위안부·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이재용 등에서 몇 가지 관참은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특별히 개혁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결국 지금 사법부 내 보수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안/못 했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의 체제 수호 기능에 헌신해야 유능한 판사가 되고 고위직 판사가 되는 시스템 속에서 사법부 개혁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우파의 부상을 막고 싶으면 민주당과 일부 판사들을 응원할 것이 아니라 계급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독립적인 노동자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한편, 1년여를 끌어 온 청와대-검찰 갈등도 여전하다.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흰소리를 했지만, 신임 법무부 장관 박범계의 검찰 인사도 정권에 대한 수사 방해 성격의 것이었다.

결국 2월 16일, 청와대 민정수석 신현수가 이번 검찰 인사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이 반려했는데도 또 사표를 냈다. 신현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데, 그는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을 도운 친문 인사였다. 그런데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는 정부의 레임덕 대처 방향을 두고 여권 중심부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듯하다.

사실 신현수 이전의 민정수석들은 조국 말고는 모두 감사원 출신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건 등으로 감사원과도 갈등을 빚고 있었다. 사정기관들을 총괄하며 (전통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민정수석 자리를 갈등을 빚은 국가기관들을 억누르고 달래어 통제할 의도로 이용했지만, 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검 갈등이나 법원 내 쟁투가 보여 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단순히 관료들의 반발 때문이 아니라 개혁 배신에 따른 환멸과 이반에서 온 것이고, 우파와 관료들은 이를 이용해 세를 회복하려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감과 분노를 적극 표현하며 문재인 정부에 저항해야만 우파의 부상에 맞설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런던은 금융 지배력을 잃고 있는가?

세계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위대한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중세 후기 베네치아부터 시작해 현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는 언제나 그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6세기에 그 중심은 처음에는 안트베르펜에서 제노바로 옮겨 갔다. 그리고 마침내, “1590~1610년 경에 중심은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했고 거의 2세기 동안 유럽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변함없이 자리매김했다. 1780~1815년 무렵에 중심은 런던으로 이동했고, 1929년에는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자리를 잡게 됐다.”

1980년대 이래 런던은 가장 중요한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부흥을 만끽해 왔다. 런던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주체인 유럽연합에 기반을 둔 덕에 이득을 누렸고, 외환 거래와 장외파생상품 같은 핵심 시장에서 다른 금융 중심지보다 크게 우위를 보이기도 했다.

추월

하지만 올해의 시작부터 암스테르담이 런던을 추월해 유럽의 주요 주식 거래 중심지가 됐다는 사실이 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난주 알려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월 현재까지 암스테르담에서는 하루 평균 87억 유로[11조 6700억 원가량]가 거래됐지만, 런던에서는 78억 유로[10조 4600억 원가량]가 거래됐다.

“지난해에는 런던에서 하루 평균 176억 유로[23조 6000억 원가량]에 이르는 주식이 거래된 반면, 암스테르담은 파리, 프랑크푸르트, 취리히보다도 뒤처졌었다.”

그러고 나서 런던에서의 “유로화 표시 스와프” 거래량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런던 금융가의 대들보였

던, 하루 거래량이 1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세계적 시장”에서 런던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월에는 40퍼센트였지만 올해 1월에는 10퍼센트로 떨어졌다. 여기서는 뉴욕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고 암스테르담과 파리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까닭은 명백하다. 바로 브렉시트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브렉시트를 계기로 영국과 유럽 대륙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간 갈등이다. 영국이 유럽연합 내에 있었을 때조차 런던이 금융에서 차지했던 우위는 결코 쉬운 문제였는데, 특히 영국이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유럽연합은 런던의 지위를 빼앗고 자공을 들이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동등성”을 인정해 달라고 협상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영국의 금융 규제가 유럽연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정하는 것이다.

영국은 지난해 말까지 유럽연합의 규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금융

규제가 사실상 같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금융 중심지에는 동등성 지위를 인정해 왔음에도 영국에 대해서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영국을 자신의 금융 규제에 사실상 묶어 두길 원한다. 보리스 존슨 정부가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여곡절 끝에 크리스마스 직전에야 타결된 브렉시트 무역협상에 금융 부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런던 금융가에서 분노가 만연했다. 하지만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총재 앤드루 베일리와 그의 전임자 마크 카니는 달리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베일리는 “영국이 지켜야 할 규칙과 기준을 유럽연합이 지시하고 결정하는 세계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유럽연합의 규제에서 벗어나면 런던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국제 금융 중심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이다. 암스테르담의 부흥이 이러한 전략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는 알기 어렵다. 한 은행

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런던 밖으로 옮겨간 유로화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는 전 세계적 파이에서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내 고객 중 그 누구도 런던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란은행에서 경제 전문가로 일했던 댄 데이비스는 <가디언>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금융 시장 거래는 수학 체증 법칙의 최고 사례다. 더 많은 거래가 이뤄지면 이뤄질수록 ... 거래를 하기에 더욱 더 매력적인 장소가 된다. 그리고 같은 동역학이 반대로도 작동한다.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이 또한 스스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런던과 암스테르담 둘 중 누가 이기든, 이 둘은 여태껏 생산적 경제 위에 균립할 수 있었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양극화를 증대시켜 온 비대한 금융 부문을 대표한다. 만약 런던 금융가가 마침내 오그라든다면, 다른 형태의 경제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42호

번역 김동욱

미얀마

유혈 진압에도 계속되는 쿠데타 규탄 항쟁

김준호

미얀마(버마) 군부의 반동적 쿠데타에 맞서 미얀마인들의 저항이 분출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을 비롯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졌다.

청년·학생들이 가장 많았지만, 노동자들도 동참했다.

미얀마 각지의 병원 약 70곳에서 의료 노동자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일부는 전면 파업을 촉구하며 대열을 지어 시위에 참가했다. 양곤에서 시위에 참가한 국영 병원 간호사 아예 미산은 외신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 보건 노동자들은 모든 공무원과 공공 노동자들에게 파업과 시위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군부 정권을 완전히 타도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는 철도 노동자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시위에 참가했고, 교사, 광원, 제조업 노동자들도 쿠데타 규탄 행동을 벌였다.

지난 수십 년간 군부에 탄압받던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들도 시위에 나섰다.

군부는 강경 탄압으로 대응했다. 시

위 진압 부대가 연일 곤봉을 휘두르고 새총과 고무탄을 쏘았다. 군부는 장갑차와 탱크를 동원해 시위대를 위협했다. 야음에 인터넷이 차단되고 경찰이 시위 조직자들을 급습하는 일이 속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탄압 때문에 2월 16일 현재 최소 9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다쳤다.

군부는 시위대 폭력을 빌미로 민주적 권리를 전면 공격하고 있다. 16일에 군부 대변인은 시위대 폭력으로 경찰 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영장 없이 혐의만으로 개인과 사유지를 수색·압수·체포하고 통신 정보를 열람·파기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정당화했다.

군부는 그나마의 민주적 권리조차 파괴하고 사회 통제력을 강화하려 한다.(관련 기사 본지 355호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반동적 군사 반란’)

그런 점에서 군부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인들의 운동은, 볼리비아에서 반동적 쿠데타에 맞서 벌어진 대중 저항, 타이에서 군부와 왕가에 맞서 벌어진 반독재 투쟁과 공통점이 있다.

미얀마인들이 그런 투쟁들에서 영감과 교훈을 얻어 대중 항쟁을 계속하기를 바란다. 타이 사회주의자 자일스 자

이 웡파콘의 지적처럼, “미얀마 민주주의의 진정한 희망은 새 세대 청년들이 타이·홍콩 대중 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투쟁하는 데에 있다. 흥미롭게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대는 타이 민주주의 운동의 ‘세 손가락 경례’를 차용했다.”

미얀마 투쟁은 이웃한 타이의 반독재 투쟁에서 힘을 얻고, 또 타이에도 힘을 주고 있다. 2월 14일에 타이 수도 방콕에서, 타이의 반독재 운동가들과 타이 거주 미얀마인들이 양국 군부를 같이 규탄하는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벌였다.(타이에 이주한 미얀마인은 150만 명이 넘는데, 그중 상당수가 방콕 인근에 이주노동자로 있다.)

웡파콘은 이렇게 지적한다. “군사 정권 타도는 미얀마 노동계급이 투쟁에 동참하는 데에 달려 있다. 여기에는 미얀마 국내 노동자들뿐 아니라 타이로 이주한 미얀마 노동자들도 포함된다.”

역사 속에서 봐도, 미얀마 군부를 떨게 할 힘은 미얀마 노동자들의 강력한 대중 행동에 있었다.

1988년 군부 독재에 맞섰던 ‘8888’ 항쟁 당시에도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잇달아 벌어져 군부를 한 발 물러서게 했다.

하지만 당시에 아웅산 수치는 자유

선거 보장을 약속한 군부를 믿자며 대중 행동을 자제시켰다. 일단 파업과 시위가 잦아들자 군부는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켰고 아웅산 수치는 연금됐다.

이번 쿠데타 직후에도 민족민주동맹(NLD)은 “군부에 탄압 명분이 될 수 있다”며 시위 자제를 촉구했고, 운동이 커진 후에도 리본 달기 등 ‘평화적’ 캠페인 방식으로만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가 아니라 대중 저항이 희망이다

민족민주동맹(NLD)을 비롯한 쿠데타 반대 운동 내 일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 등에 공개 서한을 보내, “국제사회”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회복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과 유럽의 몇몇 정부가 미얀마 군장성 일부에게 제재를 가했지만, 그 지배자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아니라 미얀마를 둘러싼 지

정학적·제국주의적 이해관계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하는 공문구를 들먹이지만, 사실은 현상 유지와 ‘정상 상태 회복’에만 관심 있다.”(웡파콘)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아웅산 수치가 이를 두둔할 때, ‘국제사회’의 말잔치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문재인처럼 이를 사실상 두둔한 경우도 있었다.

웡파콘의 지적처럼,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는 ‘국제사회’의 개입 덕분에 아니라, 남아공 청년들의 대규모 항쟁과 흑인 노동자들의 전투적 파업 덕에 종식됐다.

“진정한 희망은, 미얀마 노동계급이 군부를 박살 낼 자신들의 잠재력을 사용하고, 아웅산 수치식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에 있다.”



미얀마 양곤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말한다

코로나는 풍토병이 되고 있는가

이 글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의사)가 2월 8일 노동자연대TV 토론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에서 한 발제와 정리발언을 녹취한 것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다뤄야 하는 문제인데 기존 언론에서는 덜 다룬 부분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코로나19가 끝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의 60퍼센트 정도가 병에 걸려서 집단 면역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따르면 우리 나라 인구 5000만 명의 60퍼센트, 즉 3000만 명이 걸려야 합니다. 그중 약 1퍼센트만 사망한다고 치더라도 약 30만 명이 사망하는 야만적인 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소아마비나 홍역 등에서도 예방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획득하는데요,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백신이 아니라 감염을 통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감염 현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감염 양상 그래프를 보시면 하루에 20만~30만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확진자나 사망자 발생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죠.(아래 그림1)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나서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는 등 방역을 거의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죠.

다른 사례로는 유럽을 볼 수 있어요. 이탈리아는 인구가 우리 나라보다 조금 많은데도 확진자가 약 30만 명이나 됩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4만 명까지도 발생했는데, 초기에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었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탈리아는 아주 초기부터 중국에서 직접 오는 항공편을 폐쇄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거쳐서 오는 중국발 비행기는 방역 조치 없이 놔두는 등 그 외의 방역 조치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탈리아는 관광 자본, 호텔 자본이 주요 자본 중 하나라서 처음부터 방역 조치를 취했으면 그 자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초기에 이탈리아에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유럽 쪽으로 번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롬바르디아라는 북부 지방에서 집단 사망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 지방은 북부동맹이라는 극우가 2008년부터 집권해서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을 30~40퍼센트 줄이는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환자는 많이 발생하는데



치료할 곳이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최근에 1일 확진자가 6만~7만 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1차 대유행 이후 확진자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봉쇄를 유지하지 않고 서둘러 방역을 완화했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대유행했습니다. 영국은 2차 봉쇄를 했음에도 변이종이 퍼져서 대유행을 막을 수가 없었고, 유럽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백신이 도입됐음에도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1차 봉쇄 이후 유럽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 전체가 개방되면서 2차 파고가 닥쳤습니다. 이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서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일 확진자가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에 이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도 인구 대비 확진자 수를 보면 미국과 유사하거나 더 많았어요. 봉쇄를 미국보다는 국가적으로 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2차 발생이나 3차 발생을 거의 막지 못했을 정도로 봉쇄 조치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 추이를 보면 우리 나라와 상당히 비슷한 양상인데요, 인구가 우리 나라의 2.5배 정도 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우리 나라보다 2.5배 많아도 우리보다 못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1차 파고 후에 일본도 자숙 명령을 내려 집 안에 있다고 명령해서 인구 이동이 약 40퍼센트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나 '고 투(Go To) 캠페인,' 즉 지방으로 여행을 가라, 이틀테면 1박 2일을 가면 100만 원, 2박 3일을 가면 1인당 하루 100만 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여행을 장려해 사실상 경제를 더 우선시하면서 방역을



"미국과 유럽은 거의 비슷하게 방역 포기 전략을 썼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일 확진자 수가 8000명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여행이나 외식을 장려하는 캠페인이 여름 파고 이전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본하고 아주 유사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아베 정부가 심각한 원인이 되기도 했죠.

1차 파고 때는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주마다 상당히 강력한 봉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파고 때는 봉쇄를 약하게 했어요. 그래서 <파이널 타임스>는 라이트 비어처럼 '록다운 라이트'(lockdown lite)를 했다고 했어요. 유럽 전체가 록다운 라이트를 했고 사실 미국도 록다운 라이트를 한 주가 많죠.

말하자면 완전 봉쇄가 아니라 돌아갈 부분은 돌아가게 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섯 명 이상 모이지 않는다는 규칙을 통해서 약한 봉쇄를 했습니다.

방역 포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각국 정부들이] 1차 파고 이후 코로나19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아 '걸어 다니는 페럼'이라고 할 정도로 전파력은 매우 높는데 젊은 사람들은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자 비율을 보면 60대가 2~3퍼센트, 70대가 10퍼센트, 80대가 25퍼센트 정도였어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즉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사망한다는 거죠.

또, 자연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 전략은 그야말로 방역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듯한 인도에서조차 약 20퍼센트밖에 항체를 형성하지 못했어요. 물론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번진 뭍바이나 델리의 빈민촌의 경우는 항체 형성이 60퍼센트 이상 됐다고 하지만 말

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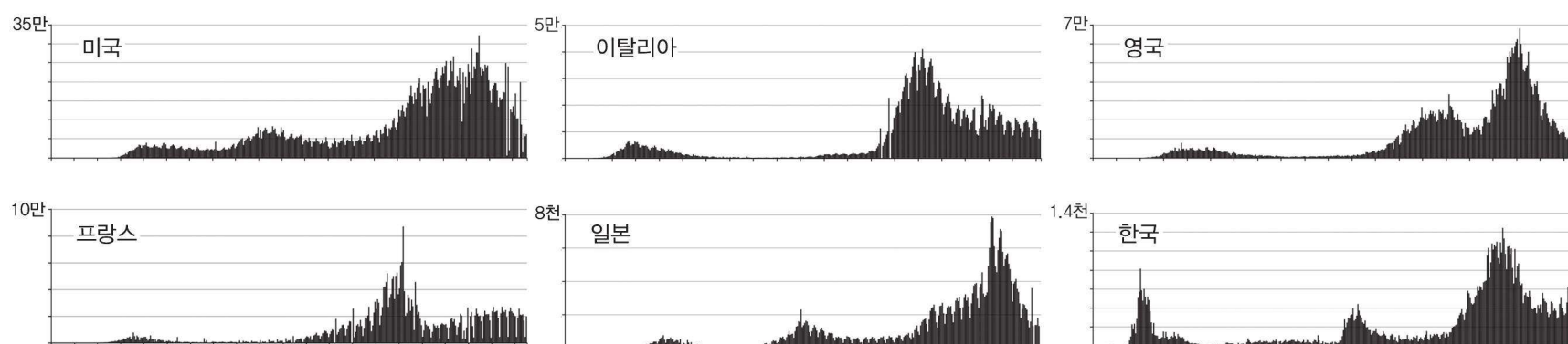
집단 면역 전략은 불가능한데 백신은 언제 나올지, 나와도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고, 막상 놔뒀더니 젊은 사람들은 멀쩡하고 늙은 사람만 죽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자본주의하에서 일할 사람은 그냥 쉽게 앓고 넘어가고, 복지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생산은 못하지만 돈(정부 재정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주로 죽는다는 그런 결론을 얻은 끝에 완전한 록다운이 아니라 록다운 라이트를 하면서 사실상 방역을 포기했던 것이죠.

유럽의 경우는 노동자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결과를 놓고 보면 미국과 유럽이 거의 비슷하게 방역 포기 전략을 썼습니다.

그럼 저발전 국가들은 어때냐? 말할 것도 없죠.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러시아의

그림1. 코로나19 확진자 일일 발생 추이(2020년 1월~2021년 2월)



▶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당히 불평등했습니다"

푸틴, 인도의 극우 정당 인도인민당(BJP) 등이 집권한 나라들에서 폭발적 감염과 사망이 벌어졌고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는 전 세계 확진자가 가장 많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네 곳입니다. 최근에 유럽 나라들이 그 뒤를 쫓고 있고요.

아프리카의 경우는 남아공 정도만 집계가 되고 다른 나라들은 집계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코로나 검사를 하지 못해서 집계 안 되는 것일 뿐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환자가 초기에 많이 발생했지만 권위주의적 봉쇄를 통해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상태이고, 동아시아 일부 국가인 베트남, 한국, 대만도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죠.

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과 유럽, 저발전국 대부분이 방역을 사실상 포기하는 모습들은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보여 줍니다.

K-방역의 성공?

한국에서는 대략 세 번의 파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3차 파고가 끝난 후에도 1일 확진자가 100명에서 50명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300명에서 500명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의료 대응에 실패해서 치명률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방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사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가 뺑점이나 10점쯤 맞았다면 우리 나라는 한 40~50점 맞은 것이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해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K-방역이 잘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거리두기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과 공장 등에서 상당히 많은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이런 곳은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

다. 또, '3밀'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밀집, 밀접, 밀폐된 공간에는 대중교통이 대표적이는데, 거기서는 마치 감염이 안 일어난다는 듯이 풍나물 버스나 지하철을 방치했죠.

사실은 역학조사로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에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탄 사실이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번졌을지 하는 걸 더 따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예 역학조사에서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콜센터, 물류센터, 공장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약 12퍼센트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요. 상당수가 생산과 유통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애인 시설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코호트(cohort) 격리'라는 것을 실시했습니



사진제공: 연합뉴스

다.

영어로 코호트 격리라고 하니까 뭔가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원래 동일 집단, 이번 경우에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을 그냥 코호트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처럼 병에 걸린 사람들과 병에 안 걸린 사람들을 섞어 두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통째로 격리한다, 이런 건 코호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코호트 격리는 말을 그렇게 쓰면서 뭔가 방역 조치 같은 느낌을 주며 사실상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사회적으로 격리해서 그냥 사망하도록 방치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의 코호트 격리는 방역 조치가 실패한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2020년 12월 사망자의 30퍼센트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생산의 핵심적인 부분은 엄격하게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비생산 부분이나 개인적 서비스업에서는 엄격한 거리두기를 실시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거리두기고 뭐고, 노인이나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방역의 또 다른 신화인 이른바

3T(테스트, 트레이싱, 트리트먼트)로 말하자면 환자를 찾아내서 추적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 이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이 단일한 주민등록번호로 전산화돼 있어 정부가 모든 시민의 사진과 지문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확인하고 나면 감염 여부는 실시간 PCR 검사를 해서 6시간 또는 아주 짧으면 서너 시간 만에 확인이 되죠.

그런데 역학조사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환자를 확인한 지 10분 만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전화 통화 내역 등이 다 역학조사관 손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어디서 돈 썼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등을 다 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태원 발 감염 때는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통해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전화해서 '너 이태원 클럽 갔었니' 하고 묻는 다든지 CCTV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보다 동선 공개가 더 무섭다는 얘기들이 많았을 정도입니다.

환자 격리, 접촉자 격리도 사회적으로 강제됐고 심지어는 전자 팔찌를 채

우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대로 격리자 중 격리 원칙을 어기는 사람만 전자 팔찌를 채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교를 보면, 초기에는 거의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바보가 됐다 하는 교사들의 탄식이 있을 만큼 K자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공부를 잘하는 상층의 애들이나 교육받은 부모를 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혼자 있을 공간이나 물어볼 부모가 없는 3분의 2 이상의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학력이 뒤쳐지는 것뿐 아니라 교육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클럽은 열었는데 학교는 안 연 거죠. 왜 학교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았을까요? 학급당 15~17명 정도 수준으로 만들고 손 씻기 할 공간을 많이 만들고 보건 교사를 많이 충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강요하면서 커다란 실험이 이뤄졌습니다. 재난 자본주의라고 해서, 재난을 이용해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을 엄청나게 시행했고, 결국 온라인 교육이 시행된 자리에는 일종의 폐허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당히 불평등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8~9월 2차 유행

당시에 비해 이번 겨울철 유행 시기에 감염자가 4.4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감염이 이뤄진 경우는 4.4배가 아니라 20퍼센트만 증가했고 공연 시설 같은 경우는 25퍼센트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8배 증가한 대중교통 등 전체적으로 매우 많이 늘어난 부분은 단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우리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고들 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2퍼센트인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1퍼센트여서 OECD 국가 중 1위다 이렇게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나라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이고요. 주요 10개국 재정 지출을 비교해 보면 GDP 대비 일본은 15.6, 이탈리아 6.8, 독일 11.0, 영국 16.3인데 한국은 3.4입니다(그림 2~3). 그래프의 짙은 색이 직접 재난 지원금이라든가 소득 보전으로 지출한 것인데 한국을 보면 밝은색이 많죠. 다시 말해, 돈을 꺾 준 겁니다. 꺾 줘서 뭐 합니까? 나중에 도로 갚아야 할 텐데, 한국은 재난지원금을 직접 주는 정도가 다른 나라의 5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일 정도로 재정 지출을 아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GDP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다면서도 확대 재정은 거의 안 했어요.

일본, 독일, 미국에서 방역 못 한다고 비난이 많았지만 일본, 독일 심지어 미국조차도 70퍼센트 이상 소득을 보전해 줬어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80퍼센트 이상을 해 줬어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현재 밤 9시, 10시 이후에 불을 켜 놓고 시위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보전을 해 줬는데 우리나라는 보전을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의료 대응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구의 지역 사회 감염 때 대구에 병상 4만 개가 있었는데 이 중 공공 병상 1000곳만 환자들을 보고 나머지 민간의 3만 9000개 병상은 거의 놀다시피 했어요. 민간 병상은 500병상 정도 이외에는 동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부산, 광주, 심지어 서울로 올라와서 공공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림2.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지출액 (G20 경제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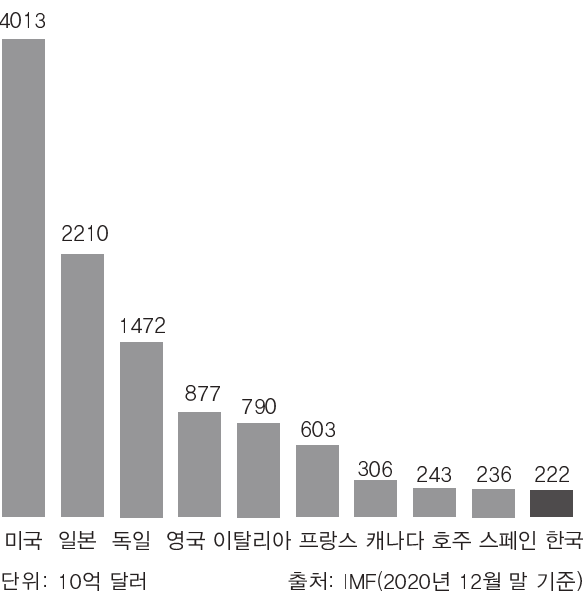


그림3. 코로나19 대응 지출 방식별 GDP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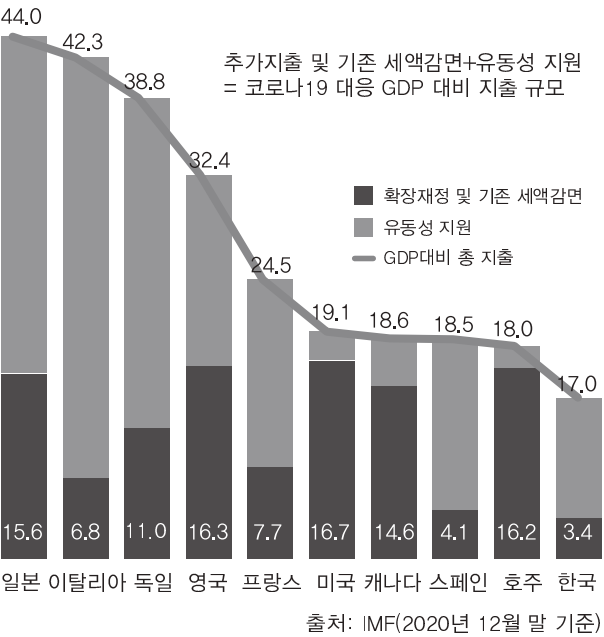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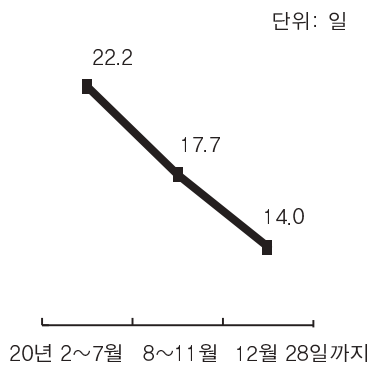


그림 4. 사망자 생존기간(평균)



낙인 찍기

대구 사태 때 신천지가 <천지일보>에 “문재인 정부가 신천지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신천지 집단은 젊은 여성이 다수라서 치명률이 낮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잘 조직된 집단이라 대구 경북 지역 감염으로 그쳤는데, 정부는 신천지를 범죄자 취급하고 낙인찍기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그랬죠.

지역 사회 감염을 상당히 막고 치명률이 낮았던 이유는 그들이 상당히 협조를 잘했고 정부가 그들을 범죄자 취급함으로써 낙인 찍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심지어 2차 유행 때도 성소수자 집단에게 낙인을 찍었고, 수도권 2차 파고 때는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3차 때는 좀 덜해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마치 코로나에 걸리면 개인이 잘못해서 걸리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환자 수는 적었음에도 공공병원이 굉장히 적어서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환자 몇백 명 수준에서도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2~3차 때도 계속됐다는 것이 우리 나라 의료 대응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노인 복지 시설에서 큰 문제입니다. 병상이 요양병원에 26만 개, 노인 요양원에 15만 개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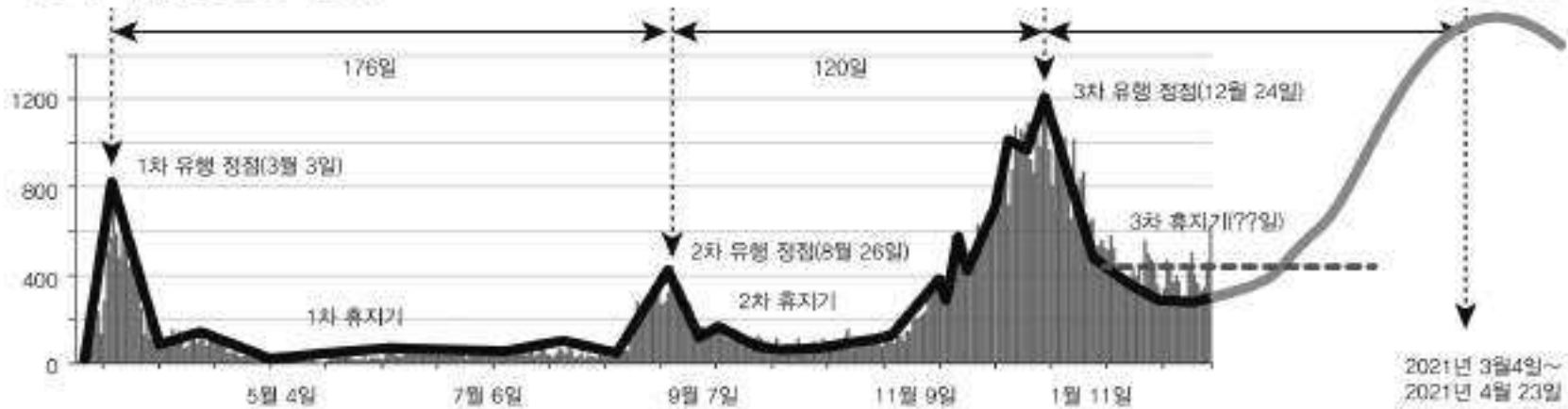
그런데 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감염이 일어날 경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기력이 없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이 집단으로 발병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발병하더라도 집단 감염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거리두기를 못 하고 발병했을 경우, 그 환자들을 바깥으로 빼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거기도 병원 아니야?’ 하면서 전혀 치료할 수 없는 곳에 그냥 방치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나라 식 코호트 격리였죠. 그래서 12월에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3차 유행 시기에 12월까지 28퍼센트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죠. 사망자 생존 기간을 보시면 2~7월에는 사망자의 생존 기간이 17~20일이었는데 12월 28일이 되면 14일까지 떨어집니다(그림 4). 즉, 요양병원에 방치돼 있다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방역 자랑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의료 대응은 하나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도

그림 5. 4차 유행은 언제 오는가?



민간병원 병상을 3차 종합병원 중 중환자실 1퍼센트만 동원했습니다. 3차 종합병원에 있는 전문가들이 ‘장충체육관 같은 곳에 체육관 병원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박애병원이라든가 남양주 현대병원 등 거점 병원을 만들었어요,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원들인데요. 그럼 삼성과 아산 병원은 도대체 뭐 했냐? 우리 나라 사립 병원은 자기에게 떠맡겨진 코로나 중환자 몇 명만 봤어요. 이런 식으로 사립 병원에 대한 특혜, 가난한 사람들만 병에 걸리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건강보험 환자보다 2.6배 정도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왔어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흑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거나 가난한 지역에서 많이 죽는 일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인간은 불평등하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보여 주는 일이죠.

우리 나라는 공공 병상 비중이 굉장히 적고 사립 병원 병상 비중은 90퍼센트나 됩니다. 그런데도 사립 병원 병상을 코로나 환자들에게 쓰지 않았다는 것은 황당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치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의료가 붕괴됐던 네덜란드, 스페인의 절반이나 됐어요.

그 외에 의료 인력의 공공성 문제가 있는데요.

K-방역을 쫓 돌아보면, 결국은 기술 감시와 보건 의료 및 공공부문 노동자, 소방 노동자, 공무원 등을 갈아 넣듯이 흡사시켜서 만든 거예요. 시민들의 안전 감수성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광우병, 세월호 참사, 메르스의 경험 때문에 높아진 거죠.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해 주니까 나 혼자 마스크라도 잘 쓰고 나 혼자 거리두기를 잘해야지.’ 이런 각자도생 정신으로 K-방역이 성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잘했다고 봐야겠죠.

차별적 거리두기

한국은 거리두기도 차별적으로 했어요. 대자본이 지배하는 곳은 거리두기를 안 지켜도 됐고 업종도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같은 개인적 서비스업, 문화, 미래 세대를 위한 업종에는 다 제한이 걸렸어요. 박물관 같은 데 얼마나 사람이 없습니까? 박물관과 학교는 문을 닫는데 클럽은 열어도 되는 식의 황당



“요양병원 환자들은 치료할 수 없는 곳에 방치돼 버려졌습니다”

한 차별이 생겼고요. 노령자,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사회적 고통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완전히 전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돈을 풀어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아프면 쉬라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말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못 쉬거든요. 유급 병가, 상병 수당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급 돌봄 휴가를 주지 않았어요. 애들이 쉬는데 아빠, 엄마가 쉬지 않으면 애들을 누가 돌보니까? 그 와중에 돌봄을 지자체로 이전해서 돌봄을 민영화하려고까지 했었죠.

한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임대료를 내려 달라고 할 정도면, 이미 줄일 수 있는 다른 경비는 다 줄인 것이고 그 부문에 고용돼 있던 노동자는 다 해고됐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 해고를 금지했는데 한국은 하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전가됐고요.

반면 코로나 예방을 미준수한 기업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콜센터 [사측이] 처벌받은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일찍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보건 의료 단체들은 공공병원이나 의료 인력을 확충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난 1년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마지막으로 백신 도입에 대해 얘기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는 10퍼센트 정도만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 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에 두 개 정도 변이종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초기 균주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변이가 어떻게 발생하느냐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 나라에 들어올 텐데요, 아무 소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백신은 중증도 감소에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꽤 괜찮다는 노바백스나 모더나, 화이자도 이 변이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는 앞으로 계속해서 풍토병이 될 것입니다.

즉,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가, 언제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한 문제일 텐데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하는 것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4차 대유행 문제에 관한 인하대 정재훈 교수가 그린 그림을 보시죠(그림 5).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인데요. 4차 대유행은 최저선이 200~500명일 겁니다. 즉, 현재보다 더 떨어지지 않고 이때부터 뛰어오를 거라는 얘기죠.

거리두기가 완화되거나 영국 또는 남아공 변이종이 우리 나라에서 지배적인 균이 되거나 백신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하루 최고 확진자 수가 1000명이 아니라 3000명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4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은 늦을 수 있다 치더라도, 보상 체계는 계속 꾸물거리고 의료적 대응도 안 하고 있습니

다.

마지막으로, 원래는 백신 개발에 2~3년 정도 걸릴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1년 만에 백신이 나왔어요. 이전 오늘날 생명 공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잘 보여 줍니다. 한편으로는 ‘미리 만들 수도 있었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스라든가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니까 ‘훨씬 전에 만들 수도 있었네’ 싶죠.

여러 회사들이 백신을 만든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선진국이 다 쓸어 갔어요. 그래서 이른바 저발전국에서는 백신을 맞을 수가 없고 2022년이 돼야 겨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선진국이 가진 특허와 지적재산권 때문에 생산도 못 해요. 말하자면 백신 소비니즘[광신적인 애국주의]이죠. 선진국이 많이 쓸어 갔고, 그 안에서도 영국에서 만든 것을 유럽 국가가 빼앗아 가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이 모자라서 2차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느냐를 기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조차 많이 사 났음에도 제대로 못 맞습니다.

백신은 전 세계가 가능한 한 짧은 시기 내에 거의 동시적으로 맞아야만 효과가 크고 변이종 등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만 먼저 맞으면 그곳에서는 면역이 있으니가 거기에 대응해 바이러스가 살아남으려고 변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변이가 만들어지면 전 세계로 돌아가고, 아직 백신을 못 맞은 나라가 있으면 또 풍토병화하겠지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19 백신, 코로나 20 백신, 코로나 21 백신, 코로나 22 백신을 다 맞아서 이른바 백신 여권에 도장을 다섯 개 다 찍는 반면, 후진국 사람들은 다섯 개는커녕 하나도 못 맞는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이러스가 도로 돌아오겠죠.

이런 문제가 경제 위기를 더 가속화시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대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지역적 불균형, 남반구·북반구 사이의 빈부 격차 문제 같은 문제들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인종 간 문제가 발생했듯이요.

인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경제 위기와 보건의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에다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3중의 위기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본주의가 과연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정리 발언

국제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진단 기기에 대해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면제·유예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가 아예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요, 어떤 것까지 특허가 걸려 있냐 하면, 인공호흡기라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다 특허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의료 기기까지 다 유예하자는 안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가 냈습니다. 그 외 몇 국가가 냈고 빈국들은 대부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는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는데도 TRIPs 유예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방역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은 트럼프만큼 바보 같은 짓을 안 한다는 것뿐이지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의 경우 학교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이 온라인이 아닌 직접 대면 교육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 둘째는 모든 실내 활동에 있어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사실은 공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공간은 다 돈을 주고 사야 하죠. 공간을 사는 게 얼마나 비싸니까? 3.3제곱미터에 혼자 들어가면 주변이 2미터가 안 돼요. 그런데 서울에서 1제곱미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최소한 5000만 원은 필요합니다. 2미터를 확보하려면 1억 원 이상이 필요한 거죠. 학교라는 곳이 그런 거리두기를 할 만큼의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보건 교사도 한 학교에 두세 명은 있어야 하는데 한 명도 없어서 순회하는 보건 교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학교를 뜯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기간제 교사를 늘린다거나 인구 절벽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교육의 미래니 어쩌니 말만 할 뿐,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지역 사회 의료 자원은 학교의 안전을 위해 동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지역 사회 의료 자원은 보건소 하나예요. 보건소 하나가 인구 40만 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교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나머지는 다 민간병원밖에 없어요. 공공병원이 없거든요. 10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공병원은 지역 사회 자원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도와줄 곳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방역 등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완전히 포기하는



중앙일보

것이죠.

그리고 학교가 쉬게 되면 그 부담은 또 누가 지게 됩니까? 가정이 지게 됩니다. 맞벌이를 하면 애들이 놀게 되고 애들이 혹시 바깥으로 나가 잘못되면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하죠.

다음으로, 이주민 차별 문제는 유럽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이제는 형벌로 되돌아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 사람들 때문에 감염이 멈추지 않거든요. 그런 약자들을 최대한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는 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중국 동포들의 문제가 있죠. 중국 동포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마치 그들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중국 동포만 코로나에 걸린다는 거죠? 코로나는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들이 걸린다고 보고, 그건 중국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코로나가 없습시다.

그러니까 인종 혐오주의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방역과 백신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팬데믹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셸트리온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과장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방역, 백신, 치료제가 K-방역의 3대 구성 요소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치료제는 3대 구성 요소가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렘데시비르는 일부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똑같은 항체 치료제라고 했다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아예 효과가 없다는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우리 나라의 렉키로나 셸트리온에서 만든 것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논문으로 나와야 해요.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 최소한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이나 국립보건연구원(NIH)에서 논문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셸트리온도 우리 나라 보건원에

서 지원해서 애초에 만들어 줬거든요. 치료 재료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논문도 안 냈어요.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왜 정부가 연구를 내주고 사실상 연구까지 다 해서 넘겼는지, 그것들을 왜 일부 사기업이 가져가야 하는지 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전만 받고 판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얘기도 하던데, 본전만 갖고 파는 건지 아닌 건지도 알 수 없죠.

또 하나는 주식으로 돈 벌지, 약값으로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왜 약이 공공제가 돼야 하는지,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백신과 치료제, 인공호흡기, 진단 키트 등을 어느 나라나 만들 수 있게 해야지만 우리 모두 살아남는다는 것이 충분히 좀 공감아 됐으면 합니다.

백신을 굉장히 빨리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접종 기준이 18세 이상입니다. 18세 미만은 대상이 아닌 거죠. 임상 시험의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00만~800만 명은 아예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미 너무 많이 확보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확보한 백신을 다 맞는다 하더라도 정말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가 있느냐, 그러기가 좀 힘들 겁니다. 또, 백신 면역은 살균 면역이 아닙니다. 즉, 그 병에 대해 완전히 멸절할 게 아니라 약하게 앓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20퍼센트가 안 맞으면 그 사람들한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100퍼센트 접종해야 하고요. 심지어 우리 나라는 아이들을 빼기 때문에 집단 면역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여행도 다니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풍토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계속 변이가 발생할 겁니다.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것을 맞았다고 하면 남아공 변이에 대한 걸 또 맞아야겠죠. 그러면 코로나20이 되든 코로나21이 되든 그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의 독성 수준이 인플루엔

자 정도로 떨어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 계산하면 4~5년 정도로 도달할 가능성이 90퍼센트 정도이고 나머지 10퍼센트 정도는 더 길다. 심지어 수십 년까지라고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감염병과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신종 감염병이 인간을 위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적 농축산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이게 한편으로는 토지의 자본주의적 이용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말 중에 자본주의는 날마다 도시의 경관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갑자기 신도시를 탁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가 다 파괴되는 거죠.

자본주의와 신종 감염병

그 과정에서 인간이 접하지 말아야 될 미생물을 자꾸 접하게 되고, 자본주의적 농축산업은 돼지나 닭 등을 전 세계에 똑같은 돼지와 똑같은 닭을 키우게 하고, A4용지 반 장짜리 공간에 닭을 키우고, 돼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기르죠. 밀집, 밀집, 밀폐. 이 '3밀'을 동물에서 구현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류독감, 새로운 돼지독감, 지난번 신종플루 등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종플루는 미국에 수출하려는 멕시코 돼지 농장에서 만들어졌고요.

반면, 공중보건 인프라는 극히 취약해서 나라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모더나, 화이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콜드체인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도 없는데 마이너스 70도가 어떻게 유지되니까? 콜드체인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상온 백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지역 겨울철에만 접종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콜드체인을 이용할 수 없어서 아주 추운 겨울날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독감 백신을 10월에 맞는 게 아니라 11월이나 12월에 맞는 거죠.

◀ 공공병원 인력(정원) 확충을 요구하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말하자면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인류의 사회 시스템을 그제 걸맞게 대응하지 못했고, 그 약점을 파고든 것이 바로 팬데믹인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된 것은 최소한 공적인 연구로 개발한 백신이나 치료제, 인공호흡기, 진단 키트 등은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유예하자, 어느 나라에서나 만들 수 있게 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3세계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약회사들은 어떤 나라에게 특허를 풀어 주면 오히려 그쪽에서 만들어서 역수출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얘깁니까? 특정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팬데믹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 같이 살지 못하면 면역이 형성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모두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라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냉장고도 없는 제3세계 나라들은 어떨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지금 드디어 G8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다른 나라만큼 재정을 풀지 않아 사람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민간병원을 포함해] 병상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은 병상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지, 한 편으로 엄청난 풍요 속에 놓여 있으면서 실제로는 공공 병상을 마련하지 못하는지, 모든 국민들이 간호사들을 도와주자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간호사들은 코로나만 끝나면 '나 간호사 그만둘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지, 왜 간호사들이 최대한 유급 휴직을 쓰려고 하는지 등 현실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이윤의 원천이 되는 자본주의, 사람의 목숨을 활용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자본주의적 보건의료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든 팬데믹을 일으키든 간에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자본주의적 토지 이용, 즉 자본주의의 그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이 공중 보건 위기와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앞으로 기후 위기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들은 결국 자본주의 그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과 제1차세계대전 와중에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후 제1차대전이 끝나고 제2차세계대전이 다시 닥쳤고, 파시즘과 스탈린주의로 인해서 인류는 긴 야만으로 빠져들었죠.

당시에는 야만으로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멸종인가" 하고 질문을 바꿔야 할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닥친 진정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국가 정책에도 일부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인 남성과 여성,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고 여겨져 왔지만, 이런 가족은 한국에서도 더는 지배적인 형태가 아니다.

(이성)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의 48.2퍼센트를 차지했지만, 2020년 현재에는 3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부부만으로 이뤄진 가구, 한부모 가구, 1인가구가 증가해 2019년 현재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가량을 차지한다.

1980년대에 결혼은 한 해 40만 건에 이르렀지만, 2019년 그 수는 24만 건에 그쳤다. 반면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동거 커플이 증가해 왔는데, 동성 커플도 그중 하나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함께 변했다. 결혼이 필수적이라는 태도는 감소해 온 반면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 등 젊은층은 전통적 견해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수십 년 사이에 한국에서도 결혼과 성이 분리되는 현상이 늘었고,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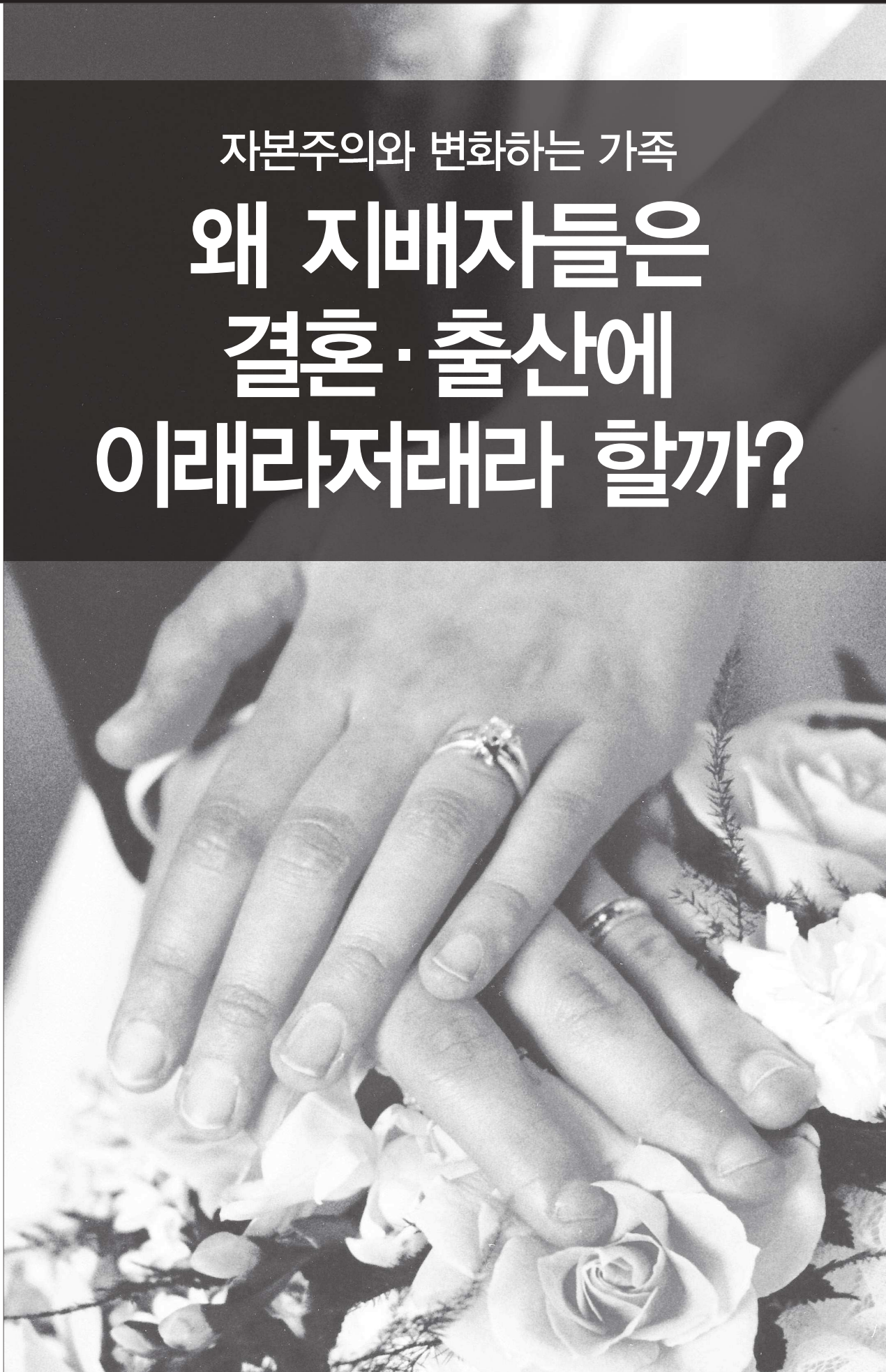
혼인율과 출산율의 하락에는 만성적 경제 위기로 말미암은 대중의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변화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교육 기회가 증가하면서 전보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자의식이 커진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피임과 낙태 기술의 발달로 여성이 임신 두려움 없이 성을 즐길 수 있게 된 것과도 관련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한국의 법과 제도는 현실에 크게 뒤쳐져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혼인과 가족의 기초를 “양성”으로 두고 그밖의 가족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연금, 보험, 의료, 사회복지, 주택, 상속, 세금, 대출 등 한국의 여러 제도가 결혼한 커플을 전제해 설계돼 있다. 가령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려고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돼 있는 주택 정책은 비혼·동거·1인 가구들에게 불만의 초점이 돼 왔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구별로 지급돼 불만을 샀다.

국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일은 당연히 여겨진다. 몇 년 전부터 몇몇 지자체들은 초저출산을 극복하겠다고 결혼장려금을 도입하는가 하면, 지자체가 직접 미팅을 주선하는 것도 흔한 풍경이 됐다. 대구 달서구청은 2016년부터 ‘결혼장려팀’을 신설해 배우자를 찾아주는 업무를 하고 심지어 구청 직원들이 이어준 커플이 잘 지내는지도 틈틈이 연락해 확인한다.



자본주의와 변화하는 가족 왜 지배자들은 결혼·출산에 이래라저래라 할까?

불과 6년 전까지, 혼외 관계에 국가가 개입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있었다.

노동력 재생산

지배자들에게 대중의 결혼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걸까?

이것은 계급사회의 중심부에 있는 핵가족제도가 자본주의 체제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이혼에 대한 편견이 줄긴 했지만, 결혼은 사람들이 가족 제도에서 벗어나기 더 어렵게 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가족은 더는 생산의 단위가 아니다. 가족이 시장에 내다 팔 상품을 만들지 않게 된 지는 오래이지만, 가족은 매우 중요한 상품 하나를 재생산하는 데서 여전히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바로 노동력이다. 노동계급 가족은 현 세대의 노동자를 돌보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드러냈듯이, 양육·부양 등이 개별 가정에 떠맡겨져 있기 때문에 가족은 이런 부담에 짓눌려 있다. 이것은 개별 기업들과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에는 상당한 이득을 안겨 준다.

2014년 통계청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연간 360조 7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명목 GDP의 24퍼센트에 달하는 액수다. 물론 각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가사노동을 정확하게 추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지배자들이 가족에 기대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특히 양육 등 가사노동은 개별 가정의 여성에게 주로 떠맡겨져 있다. 이런 가족의 구실은 여성의 경력 단절, 저임금 등으로 이어지며 각종 여성 차별의 원인이 된다.

물론 결혼식장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신부들 중에 자신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혹은 다음 세대 노동자들의 재생산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서 자신의 삶에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으로 결혼한다.

그렇더라도 가족이 자본주의 내에서 극히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여러 경제적 제약과 사회적 압력들이 끊임없이 가정의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소망은 종종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고 가족은 폭력, 학

대와 방임으로 얼룩진 끔찍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물론 자본주의 하에서도 가족의 모습은 변해 왔고, 나라마다도 다소 다르다. 유럽 등지에서는 결혼하는 커플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혼외 출산도 많다. 오늘날 EU 국가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43퍼센트는 혼외 출산이다.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의 출산이 유력한 사회 현상이었다.

이런 현실의 변화 속에서 동거 커플에도 법률혼과 유사한 혜택을 주는 입법이 해외의 여러 나라들에 도입돼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들도 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진보이고, 한국에도 도입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에서조차 한 사람에게 정착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특히 여성에게)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아이를 기르며 사는 경우가 많다.

결혼 관계 내에 있든 아니든 자본주의 지배자들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혼외 관계에 있든 아니든 개별 여성과 남성에게 후대의 노동계급을 양육할 책임이 떠넘겨져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면서 양육과 돌봄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의 지원이 늘어 왔지만, 이른바 복지국가로 알려진 선진국에서조차 기본적인 양육과 돌봄의 책임은 개별 가정에 있다. 국가가 제공한 일부 지원조차 긴축으로 말미암아 공격받고 있다.

즉,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이런 변화가 노동력 재생산의 기본적 책임을 떠안고 있는 개별화된 가족 단위를 근본에서 바꾼 것은 아니다.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의 필요는 개인들의 성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성적 관계를 맺을지는 순전히 개인이 선택할 문제가 돼야 한다.

선택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들이 개선돼야 한다. 가령, 현재 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 등은 ‘가족’의 개념에 혼외·혈연·입양으로 형성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혼 등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도 기독교 우파들이 이를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라며 반발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민주당이 이 개정을 진지하게 추진할지도 지켜볼 문제다. 동성결혼도 허용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결혼제도로 묶이지 않은 가구가 복지, 연금, 주거 혜택 등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게끔 제도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공적 돌봄, 질 좋은 공공주택 등 노동계급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요구하며 싸우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자본주의 정부는 출산율이 너무 저하하자 양육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한부모 가정이나 비혼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럼에도 이런 지원은 대중의 필요에 한참 못미치고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데, 자본주의 이윤의 일부를 사용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개별 가족에 의존하는 자본주의에서 지배자들은 대중에게 끊임없이 결혼과 출산을 하라는 압력을 가한다. 돌봄과 양육, 가사 부담이 전면적으로 사회화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계와 삶을 선택할 자유에는 실질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감염병과 경제 위기로 기업주들과 자본주의 국가가 이윤 지키기에 더더욱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급 대중과 여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성취하려면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에 맞서고 자본주의 자체에도 도전해야 함을 뜻한다.

이현주

미등록 이주민 40만 명 무조건, 전면 합법화하라

임준형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재인 정부 이주민 정책의 모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등록 이주민은 39만 200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12월 기준). 전체 이주민 중 미등록자 비율은 19퍼센트를 넘었는데 2007년 이후 가장 높다. 이주민 5명 중 1명은 미등록 상태인 것이다.

40만 명에 가까운 미등록 이주민을 제외한다면,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단속·추방 중심의 정부 정책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은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한편, 항공편이 막혀 신규 이주노동자 유입이 급감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사용자들은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단기 순환' 기조의 기존 정책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원활한 이주 노동력 공급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2월 2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코로나 방역 대책과 노동력 부족 해소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논의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노협은 “고용허가제 운영에서 발생한 미등록자만이 아니라 모든 초과 체류자들을 포함한 전면적 합법화”를 요구했다.

당사자들의 생명과 안전, 방역을 위해서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도입 물량에 따라 미등록 이주민의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설령 미등록 이주민이 접종 대상에 포함돼도 정부가 단속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해 주지 않으면 미등록 이주민이 백신 접종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농축산업과 중소기업들이 미등록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들을 내국인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는 존재로 비난하며 제대로 된 지원을 하는 데는 인색하다.

사용자 프렌들리 합법화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자체가 급진적인 조처는 아니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한 사례가 적지 않다. 1980년대부터 2005년까지 미국과 8개 유럽 국가들은 총 22번 단발적 합법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의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다. 가령, 조건부 ‘합법화’를 통해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력이 부족한(주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미등록자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 합법화는 이주민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여길 수 있다.

법무부는 2월 15일 코로나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동포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 최장 13개월 동안 농어업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농어업에서 일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어야만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미등록 합법화의 사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례는 정부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체류·취업 자격을 부여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조건 없는 합법화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운동 내 일각에서 나이, 업종, 숙련도 등 노동시장의 요구에 따라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사용자들의 필요에도 부합해야(주되게는 정부를 상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외노협이 노동력 부족 해소를 합법화 요구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것도 이런 관점에서 비롯한 듯하다. 외노협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과거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전면적 합법화는 아니더라도 … 미등록자 합법화에

나섰던 것은 합리적 외국인력정책의 수립과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책 [정착]의 오기인 듯]을 위한 시도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합법화’는 이주노동자에게 별로 이로운 방식이 아니었다. 정부는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미등록자만 최대 2년의 체류를 허용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충분히 들어올 때까지 인력 부족을 막고자 일부에게 일시적 체류를 허용하고, 오랫동안 미등록 체류하며 한국에 적응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려 해 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쫓아내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합법화된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하도록 했다. 이주노동자들의 바램은 무시하고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게 배치한 것이다.

사실상 합법화라기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일부를 고용허가제 틀 안으로 묶여넣는 정책이었다. 고용허가제가 강요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해 미등록이 되는 이주노동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 비춰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방안이었다. 이는 외노협 성명서에서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를 고용허가제를 대신하는 합리적인 외국인력정책을 시작하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한 것과도



선별 진료소 미등록 이주민은 단속에 대한 우려로 진료소 방문조차 어렵다

모순된다.

이런 방식에 타협하면, 이주민의 권리를 온전히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이주민 당사자들의 단결과 저항, 내국인들의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조건 없는 합법화를 요구해야 한다.

국경 통제 반대

귀국은 이주노동자가 처지와 삶의 방향에 맞게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노동력을 누구에게 판매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경은 자본주의가 부상하고 민족

국가가 확립되면서 등장한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국경 통제는 이주 노동력 공급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주민을 선별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등 이윤 획득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구실을 하고, 국적에 따라 노동계급을 분열시켜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도 낸다.

따라서 국경 통제에 반대하고 이주민의 자유왕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를 요구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는 조건 없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서평 |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최초의 한인 볼셰비크, 알렉산드라 김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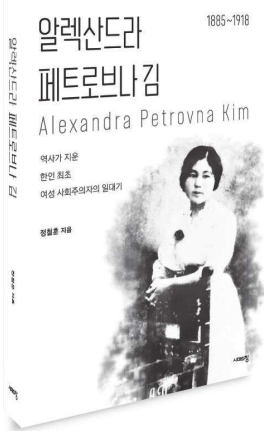
김은영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시대의 창)은 최초의 한인 볼셰비크였던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사진)의 일대기를 다룬 평전이다. 저자는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의 생애를 다룬 소설과 평전을 썼던 정철훈 씨다. 지난해 봄에 나온 김금숙 씨의 만화책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서해문집)의 원작자이다. 정철훈은 자신이 쓴 책, 편지, 알렉산드라와 함께 활동했던 이인섭과 러시아인들의 증언 등을 다시 정리하고, 추가로 나온 자료와 연구를 집대성해 이 책을 완성했다.

이 책은 제정 러시아의 차르와 1917년 케렌스키 정부의 탄압 등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착취와 차별로 고통받는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해 헌신한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의 삶을 생생하게 잘 보여 준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 볼셰비키 세력이 미약한 극동 지역에서 볼셰비키를 성장시키고 노동자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정치 활동은 매우 감동적이다.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는 1885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 2세로 태어났다. 러시아에 살던 조선인·중국인 이주민의 권익을 위해 일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의 기나긴 동청철도 건설 현장 등을 다니며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삶을 보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살았다. 이런 삶의 경험과 러시아 노동계급의 투쟁 속에서 부상한 혁명적 사상에 매료돼 평생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했다.

알렉산드라는 우랄 지역에서 중국인·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어,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역사가 지은 한인 최초 여성 사회주의자의 일대기
정철훈 지음, 시대의창, 592쪽, 19,800원

중국어, 러시아어 통역을 도맡아 하면서 항만과 철도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지원했다. 관리자들의 눈엣가시였던 그녀는 결국 통역에서 해고됐다. 이후 노동자 사무실에서 서기 일을 하면서 벌목장 노동자들을 규합해 우랄노동자동맹을 조직하는 데 앞장섰다.

암살 위기도 겪으면서 노동자들을 조직한 알렉산드라는 항상 볼셰비키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활동했는데, 볼셰비키 활동가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숨을 곳을 마련해 줬다. 이런 활동이 알려져 볼셰비키의 뛰어난 조직가인 스페르들로프가 알렉산드라를 만났고, 알렉산드라는 1916년 볼셰비키 당원이 된다.

알렉산드라는 하바롭스크 시 볼셰비키 당 서기와 극동소비에트 외무위원을 맡아 활동을 정력적으로 펼친다. 하지만 1918년 내전 시기에 반혁명 세력인 백군에게 붙잡혀 34살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총살당한다. 알렉산드라는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전향을 거부해, 혁명가로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았다.

국제사회주의

이 책은 러시아 제국에 살던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의 끔찍한 처지와 현실을 잘 다루고 있다. 1860년대부터 중국인과 조선인 등이 먹고 살기 위해 러시아로 몰림듯이 이주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임금을 체불당하기 일쑤였고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장애인 이 되거나 목숨을 잃는 일도 다반사였다. 중국인과 조선인들은 소수 민족 차별로도 천대받았다. 알렉산드라는 통역을 하며, 고통스런 삶을 사는 노동자들의 입이 돼 주었고, 그들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동분서주 일했다.

알렉산드라는 국제주의 사상과 실천으로 무장된 혁명가였다. 소수 민족 차별을 통해 노동자를 분열시켜 지배하던 차르와 케렌스키의 지배 전략에 맞서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을 강조했다. 조선인, 중국인, 러시아인, 포로병으로 붙잡혀 일하는 각국의 노동자들을 조직할 때마다 국제 노동계급은 하나라고 말했다.

알렉산드라는 1918년에 창당한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의 활동에도 관여했는데, 조선 독립이라는 민족 해방과 사회주의 혁명의 과제를 결합시키려 노력했다. 독립 국

가 건설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사회주의 혁명을 먼 미래의 일로 남겨두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제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민족 해방을 지지했다. 제국주의 세력이 약화되고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이 강화되기 위해 민족 해방 투쟁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하기를 바랐다.

이 책은 볼셰비키가 멘셰비키와 달리 차별과 노동자 착취에 진지하게 맞서고 식민지 해방 운동에도 진지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해 준다. 또, 러시아 극동 지방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 투사와 사회주의자들의 활동도 엿볼 수 있다. 러시아에 사는 조선인들이라 할지라도 계급 기반에 따라 조선 독립과 러시아 혁명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점도 보여 준다. 원호인들이라 불리던 부자들의 조직인 전로한족회는 일본에 저항하는 실천을 하지 않았고, 볼셰비키에 반대했다. 반면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의 조직인 한족중앙총회는 볼셰비키와 러시아 혁명을 지지했다.

알렉산드라의 혁명적인 삶과 투쟁은 노동자들을 감화시켰을 뿐 아니라 신부였던 자신의 두 번째 남편까지 투사로 만든다. 혁명가로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알렉산드라의 생애는 우리에게 묵직한 감동을 선사한다.

혁명가의 삶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책은 소책자 판형으로 600페이지 가까이 되지만 읽기를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필요는 없다. 워낙 쉽고 재미있게 쓰인 책이라 단숨에 읽을 수 있다. 시대적 배경도 적절하고 친절하게 서술돼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독자편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ws@wspaper.org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건축 막지 마라

지난 2월 16일 대구 북구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이슬람 사원 건축을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민일 합의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 행정처분 위반에 해당해 건축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즉, 강제성이 있는 조치다.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자들은 “이슬람 사원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이 드는 반대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예컨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지역주민과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 그리고 초등학교생들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라서 건립을 반대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슬림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슬람 사원이 건축 중인 장소에는

원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2014년에 무슬림들이 이 주택을 사들여 주택 앞마당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고 한다. 설사 이 ‘불편’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주택이 헐리고 제대로 된 사원이 건축되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사원이 건축되고 나면 무슬림들이 더는 탁 트인 마당에서 종교 행사를 치를 필요가 없어지니 말이다.

나는 부산 금정구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걸어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다. 이 사원은 1979년에 세워졌는데, 당시 이 동네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여러 건물이 뿔뿔이 들어섰고, 지금은 이슬람 사원 앞뒤 양옆으로

주거용 건물들이 바짝 붙어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소음 문제 같은 건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 시간에 맞춰 이슬람 사원에 가 봐도, 사원 건물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파티를 벌이는 것도 아닌데 건물 안에서 나는 소리가 바깥에 왜 들리겠는가? 대구에 세워질 이슬람 사원도 부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 북구청은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합의점을 도출하라며 공사를 중지시켰다. 도대체 무엇을 합의하라는 것인가?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한 통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슬람 사원 건설이 끝이 아니라 이후

에도 인근 주택을 매입해 점차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을 우려한다.”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익명의 한 주민은 더 노골적으로 “일대가 이슬람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의 본질이 ‘이슬람 혐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 셈이다.

우리 집 근처 이슬람 사원을 보자면, 1979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이슬람화”는커녕 사원 근처에 ‘이슬람’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것이라고는 딱 두 군데뿐이다. 2005년에 터키 음식점이 문을 열었고, 몇 년 전에는 모로코 음식점이 생겼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내심 아쉬울 정도로, 고작 이 두 군데밖에 없다!

나는 사원 근처의 지하철역을 매일 이용한다. 가끔 무슬림으로 보이는 이주민들이 지하철역에 보이는데, 그들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빠른 걸음으로 이슬람 사원을 향해 걸어간다. 주택가이다 보니 다들 느긋한 비무슬림 지하철 이용객들과는 대조적이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쓰였다. 내가 오해한 것이기를 바라지만, 대구의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이슬람 혐오자들의 반대와 이를 핑계로 공사 중단 조치를 내린 대구 북구청을 보면 결코 오해가 아닌 것 같다.

대구 북구청은 공사 중단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에는 아무런 타당한 명분이 없으며, 그저 이슬람 혐오의 발로일 뿐이다.

김동욱



“상담 인력·업무·멘트까지 관리하는 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상담원 직접고용하라

양효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3주차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공단 측은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3주간 파업으로 상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단 측은 ‘고객센터 업무는 공단의 핵심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하는 일 이 결코 부수적인 게 아님을 보여 준다.

김숙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 각 지사로 콜을 전환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지사에서 일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상담 전화를 받느라 다른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런데도 민간위탁 외주화로 인해 상담사들은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외주업체들이 직접고용을 반대하며 ‘회사의 자산을 국가에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돈벌이 일 뿐임을 보여 준다. 민간위탁 외주업



4대보험 공단 중 건보 고객센터만 아직 직접 고용되지 못했다 2월 8일 공단 본사 앞 파업 집회

체들은 실적에만 눈이 멀어 상담사들을 채근하는 데만 혈안일 뿐,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에는 관심이 없다.

김숙영 지부장은 말한다. “같은 걸 물어도 사람마다 정보를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상담 업무의 교육이나 질 관리가 엄청 중요하합니다. 그런데 외주 업체는 상담의 질에 관심도 없어요. 계속 ‘전화 받아라’만 합니다.”

내년 7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실시될 예정이라 상담 업무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2018년 1단계 개편 당시, 변경 사항에 대한 문의가 폭주해 상담원들이 어려움과 하중에 시달린 바 있다. 이런 혼란과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단이 상담 업

무를 직영화해 교육과 운영을 책임지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상담원들을 관리·통제하는 실사용주다. “인건비만이 아니라 누구를 고용할 건지, 인력을 어떻게 얼마를 주고 어떤 업무를 할 건지, 하다못해 마무리 멘트까지 공단이 저희를 다 관리하거든요.”(김숙영 지부장) 따라서 노동자들이 공단 측에 직접고용,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공단 측은 고객센터 인력이 너무 많아서 직접고용이 어렵다고 말한다. 자기 책임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만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인력인 다른 공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그

만큼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4대보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다(2017년 기준 전 국민의 97.2퍼센트). 노동자들은 지금 인력으로도 업무를 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을 지경이다.

문제인 정부의 무책임

공단 측은 이렇게 직접고용은 거부하면서, 언론에 처우를 개선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들이 지적하듯, 지금의 외주화 구조를 고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처우 개선과 거리가 멀다.

김숙영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공단이 얘기하지 않으면 [외주업체는] 코로나 상황에서 칸막이, 마스크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데, 업체에 맡겨 놓고 처우를 개선한다? 이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저희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난항을 겪는 데는 문제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 문제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누더기로 만든 데다, 민간위탁 부문의 정규직화는 아예 포기해 버렸기 때문이다.

용역업체와 민간위탁을 나누는 모

호한 기준을 이용해, 공단 측은 고객센터가 3단계 전환 대상(민간위탁)에 해당한다며 전환 책임을 회피했다.

2월 16일 국회 환노위에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핑계 대며 건강보험공단 상담원의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 즉답을 회피했다.

정부와 공단 측이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핑계 대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이 모두 단일한 것도 아니다. 파업이 진행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토론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전화방’이라고 해서 공단에서 상담 일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에는 [고객센터가] ‘우리 업무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김숙영 지부장)

투쟁 속에서 노조 조직이 확대되고 활력이 늘어나고 있다.

“조합원들은 왜곡된 언론 보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투쟁해야 한다며 오히려 더 다져지고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지금 일주일도 안 돼 과반이 넘는 상태죠. 많은 분들이 노조에 들어오는 걸 보고 조합원들도 힘을 받고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가 더욱 넓어져야 한다.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김영익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듯하다. 2월 10일 미국 CNN은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고 수주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2월 5일 한미 두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CNN 보도가 맞다면, 이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듯하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경비로 지급되는데, 처음 지급된 1989년 이래 꾸준히 인상돼 왔다. 그래서 2019년 현재 한국은 1조 원이 넘는 돈을 매년 주한미군 경비로 낸다. 사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방위비분담금 외에 토지 무상 공여, 인력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으로 매우 많은 자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평택미군기지 이전비,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 등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는

돈은 공식·비공식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전임 트럼프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처음에는 무려 방위비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 같은 부유한 동맹국들이 “공평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말이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인상 요구 수준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50퍼센트 인상을 고집해 한·미 간 협상은 교착돼 있었다. 협상 지연으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동안 무급 휴직을 해야 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가 동맹 강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듯하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폭을 정해 협상을 빨리 매듭짓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공평한 몫?

그럼에도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바이든 정부는 상당히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CNN 보도를 보면,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13퍼센트나 인상된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 서민 지원에는 인색한 점을 감안한다면, 13퍼센트는 정말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률이다.

게다가 합의문에 한국 정부가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대하고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한다는 약속이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에 국방예산을 늘리고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하는 방안을 타진한 바 있다. 그런 점에 비춰 보면 CNN 보도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즉, 한국은 13퍼센트 인상 외에 동맹으로서의 기여를 더 확대하기로 미국에 약속하는 셈이다.

방위비분담금은 그 자체로 문제다.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자본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 군대이자, 일본을 비롯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이

해관계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

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국] 안보를 지키는 ‘이불’ 같은 구실을 한다”(《공포, 밥 우드워드, 2019). 그가 보기에,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이 있어야 “[미국] 본토를 방어할 능력을 확보하고 …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한국을 “강력한 보루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불안게 하는 한 요인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경쟁에 한반도를 휘말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한미군을 위해 한국인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불

게다가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해외 주둔 미군의 태세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되고 대중국 견제 구실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올해 1월 5일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한미연구소 화상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의 준통합사령부로서, 우

리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 전력 목표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즉, 주한미군이 대중국 전략을 수행하는 군대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미 미군 경찰기자들이 중국군을 감시하려고 주한미군기지에서 출격해 서해로, 남중국해로 날아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제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한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주류 정치인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이 자신들한테 이득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문제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에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인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문제인 정부가 줄곧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을 얘기해 온 까닭이다.

바이든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이후 동맹 강화를 위한 다른 쟁점에 집중하려 할 것이다. 쿼드(미국, 인도, 일본, 호주)의 4자안보대화 확대나 한·미·일 동맹 강화 등 일련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최근 바이든 정부 인사들이 한일 간 불협화음을 우려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비롯해 동맹 강화에 대한 문제인 정부의 협력 움직임을 계속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